

용공혐의를 씌우기 위해 원문에 담긴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 모두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월간조선은 필자를 수정주의 학자로 만들기 위해 수정주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한 줄도 언급하질 않고 있다.

수정주의는 남침설 유도론이고, 그 핵심에는 브루스 커밍스가 존재하며, 수정주의 입장을 소개하고 브루스 커밍스를 높게 평가한 필자 역시 수정주의에 경도되어 있다는 월간조선의 논리는 단순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필자에게 있어 수정주의는 정통적 시각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한계를 안고 있는 극복의 대상일 따름이다. 필자는 원문과 다른 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수정주의의 한계를 명백히 지적하여 왔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반대적 이념시각(필자주: 수정주의)은 모든 기원과 원인을 오직 과거 역사로부터만 연역하는 결정주의적 설명방법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그것 역시 한계와 오류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107면)

“커밍스의 연구는 전쟁을 논하되 전쟁의 핵심이 빠져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중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의 도래 그 자체가 소련 및 중국과 북한체제의 결정적 역할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의 내부 모순과 갈등의 결과에 중심을 둬으로써 그것을 전쟁을 야기한 북한사회에 더욱 온정적이고, 농민혁명적 사태를 과대해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최장집,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의 의미와 평가」, 박명림 저,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권, 508면)

월간조선은 필자의 커밍스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놓고 시대에 뒤떨어졌진 것이며, 이미 80년대 후반에 생명력이 소실한 이론을 현재까지도 인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필자의 학문적 소양을 폄하하고 있다.

커밍스의 연구성과가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필자 나름대로의 예측이 틀릴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과 소련에서 해제된 한국관련 자료를 근거로 커밍스의 연구성과를 깡그리 부정하는 월간조선의 경직된 자세는 비학술적이며, ‘자료만능주의’의 전형인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학계에서조차 그의 견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한국현대사와 한국전쟁에 관한 커밍스의 연구업적과 스칼라십을 인정하게 된 것은 광범위한 1차 자료의 활용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가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한국학을 그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게 된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외교사와 정치사회학, 역사사회학과

농민사회학을 조화롭게 아우르면서 구사된 단단한 이론들과 방법론에 있었던 것이다.

### 3. 자의적 해석에 기초한 왜곡사례

#### □ 볼셰비키 혁명과 문화 대혁명

앞에서 보았듯이 월간조선은 어디서부터가 원문의 인용이고 어디서부터가 요약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짜집기식 편집을 하고 있다. 이젠 그것도 모자라 학술적 저술에서 사용한 가치중립적 용어에까지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월간조선은 짐짓 점잖게 다음과 같이 필자의 용어사용이 신중치 못했음을 나무라고 있다.

“학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판단 기준 중의 하나는 그 학자가 사용하는 용어일 것이다. 예컨대 「혁명」이란 용어는 기존의 관습, 제도, 방식을 폭력적으로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으로서, 「反혁명」이란 용어와 비교할 때 善한 것에 해당하며, 「反혁명」은 惡하다는 이미지를 준다. 崔위원장은 좌파는 「혁명적 민족주의 세력」, 우파는 「反혁명적 집단」으로 규정했다. 혁명과 反혁명이 실령 가치중립적인 정치학의 용어라 할지라도 학문적 배경이 얇은 사람들에게 「혁명은 좋고 따라서 혁명을 추구하는 좌파도 좋은 것」이란 인상을 심어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216면)

필자의 글에서 혁명이란 의미는 사회질서의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객관적인 사회과학 용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사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언술을 사용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오히려 선악의 가치판단을 개입해 반혁명(counter-revolution)과 구체제의 부활을 도모하는 반동(reaction)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월간조선의 천박한 인식수준이야말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월간조선의 논리대로 한다면, 善의 의미가 개입되어 있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나 중국의 문화대혁명 등의 단어들은 우리의 세계사 문헌에선 모두 삭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무지

월간조선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민족주의를 지상최고의 정치이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 싶다. 월간조선은 필자가 “남한내의 남로당 세력을 「남한내의 민족세력」이라

고 표현”했으며 심지어는 “반민족적 공산세력을 혁명적 민족주의세력이라고 기술”했다며 흥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족주의에 대한 학문적 몰이해와 문맥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도출된 억측에 불과하다. 먼저, 학술적으로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과 복지를 증대시키는 어떤 좋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가져야 한다는 정치적 신조”를 의미한다(E. Gellner). 이는 독일의 나찌즘과 이태리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민족주의를 내걸고 신봉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세력으로 지칭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음 인용구는 필자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견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민족주의와 코포라티즘은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 이익, 가치를 존중하는 일체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발현을 억제하는 집단주의 정신을 대표하는 이념이다. 한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과 이익집단의 다양하면서도 상호갈등적인 이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약점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이 표방하고 있는 전체의 이익은 오늘날 자본주의사회라는 특수한 조건속에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그리고 이해를 같이 하는 그들의 이익과 조화될 수 있을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는 이 기준에 의하여 재조명되지 않으면 안된다”(「국가의 역할중대의 조건」, 한국정치학회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118면, 1987)

필자는 8.15 광복 이후 시기에서 남북의 분단에 반대하고 통일국가를 지향했던 세력 모두를 민족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당시의 시기에서 이러한 세력은 김구, 김규식 등의 남북협상파와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산주의세력 모두를 아우른다. 필자는 전자를 「민족세력」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공산주의 세력의 경우 통일을 위해서는 기존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신조를 동시에 가졌다는 점에서 「혁명적 민족주의세력」으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 논리의 비약과 혼동: 操作과 造作

“역대 우리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6·25 전쟁을 통제하고 조작했다는 최위원장의 논리는 충격적이다”는 월간조선의 해석은 논리의 비약과 혼동에 기초한 것이다. 사려 있는 독자라면, 다음의 필자의 설명이 한국전쟁에 대한 경험이 국가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인식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임을 별 충격없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에 있어 한국전쟁은 심대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왔다. 전쟁의 참혹상은 사회 내의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각인되었다. 분단은 휴전선을 따라 더 깊이 새겨졌고,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에 대한 공포는 정치문화의 한 내재적 일부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이제 전쟁의 직접적 경험은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것으로 기억할 것인가 하는 문제조차도 남한 국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도록 조작(操作)되기 시작했다. 전쟁의 경험과 고통은 이제 언어를 통제하고 공통의 언술체계를 통제하며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반공주의적 세계관을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에 의해서 취합되고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전전과 전후 정치의 커다란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165-6면)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필자는 “우리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6·25 전쟁을 통제하고 조작했다”는 선정적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 원문은 조작의 대상이 전쟁이 발발하였던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전후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기억방식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필자의 원문에 사용된 조작(操作)이라는 용어는 발생한 일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든다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있다. 그러나, 월간조선은 전체의 문맥을 파악하지도 않고 조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마치 필자가 역대정부가 전쟁의 실상을 날조(造作)했다고 말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 4. 원문의 훼손

월간조선이 엄밀한 개념 사용과 정확한 인용을 중시하는 학술지가 아닌 대중잡지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당한 인용의 빈도는 일반적 수준을 넘어 필자의 주장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우기 그러한 부정확한 인용이 한결같이 필자의 연구를 친북논리에 연결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표4>

	월간조선	원문
①	<다수의 기독교 신자를 비롯하여 공산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동시에 원폭투하 소문과 폭격의 두려움을 피해 남하하는 사람들 역시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210면)	「물론 거기에는 다수의 기독교 신자를 비롯하여 공산통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동시에 원폭투하 소문과 폭격의 두려움, 초토화되어 가는 북한지역에서 집과 먹을 것을 찾아 남하하는 사람들 역시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②	<친일세력의 재등용은 해방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213면)	「한국민중에게 부일협력자들의 공적 지위에서의 재등용은 해방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160면)
③	<지배세력의 해계모니는 매우 약했는데 1950년대의 체제유지는 한국전쟁의 폭력성이 휘몰아친 기간에만 가능했다>(215면)	「지배세력의 해계모니는 매우 약했는데, 50년대의 체제유지는 다만 한국전쟁의 폭력성이 휘몰아친 여파가 미친 기간에만 가능했다」(133면)
④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反共국가의 확립을 우선시한 미 군정의 정책은 우리가 제1의 정치균열이라 부르는 현상을 야기시켰다>(214면)	「남한 내 단독정부의 수립과정에서 미군정은 민주주의적 개혁보다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반공국가의 확립을 우선시했으며, 이로부터 우리가 제1의 정치균열이라 부르는 현상을 야기시켰다」(162면)

① 원문은 월남의 동기를 종교적·정치적 신념과 북한주민들 사이의 전쟁공포증의 확산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지만, 월간조선의 문장은 후자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② 일제의 끔찍한 식민통치를 벗어나 자주독립국가를 열망하였던 민중들에게 친일파의 부상은 해방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당시 일반인들의 정서를 적절히 기술한 이러한 표현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될까? 조선일보가 이러한 표현에 거부감을 갖게 된 것은 자신들의 불명예스런 전력때문이 아닐까?

③과 ④는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데 실패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③의 경우 원문은 전쟁의 여파가 집중적으로 미쳤던 50년대 전과정을 의미하지만 월간조선의 인용문에 따르면 戰時(1950-53)에 한정되고 만다. ④ 역시 미군정이 부과하고자 하였던 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개혁을 생략함으로써 정치균열의 한 축을 사상시켜 버리고 말았다.

### Ⅲ. 조선일보 보도 모니터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

##### 1. 1차

##### 조선일보 보도 검증받아야 마땅

- 사실 왜곡 남발, 사상공세 퍼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한 방종일 뿐 -

최장집 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월간조선, 주간조선 포함)의 보도를 두고 각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시위를 하는 등 각계 각층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시에 [박고함 찬나라운드]등 이름이 생소한 보수우익단체들의 최고수 비난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최장집 교수는 월간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포금지 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 논란을 야기한 장본인인 조선일보는 10월 21일 이후 거의 매일 관련 기사를 싣고 있는데 이들 후속기사는 이 논란을 사상논쟁으로 몰고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10월 24일 4면의 경우, 이례적으로 광고도 싣지 않고 전면에 기사화하는 등 구시대적 사상논쟁에 지면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불과 얼마전 이승복 군 보도에 이어 또 다시 '지면 사유화'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선일보의 후속보도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초기에는 조선일보의 직접적인 반박기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여론전에 밀린 점을 인식한 듯 최근에는 독자투고와 외부필자의 칼럼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조선일보로서는 이러한 편집으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일 이들의 글이 비판받는다 해도 그 비판에서 한층 자유로울 수 있으며 동시에 독자투고에 대한 비판은 자칫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언제든지 이를 역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조선일보가 목소리 높여 외치는 언론의 자유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책임을 수반한 언론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는 한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글에 대한 비판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더 나아가 본회 신문분과 역시 조선일보 독자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 조선일보의 왜곡된 주장 반복하는 외부필자 칼럼과 독자투고

이들 기사의 공통점은 두가지다. 첫 번째 조선일보가 최고수 논문을 상당부분 왜곡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그 주장을 그대로 반복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월간조선이 대표적으로 왜곡한 '6.25전쟁은 민족해방전쟁'과 '역사적 결단'부분은 거의 모든 독자투고에서 최고수 비판과 조선일보 옹호의 근거로 등장하고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 역시 '공인의 사상검증은

언론의 자유'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공인의 사상을 검증할 자유'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 주장이다. 두 번째, 학자로서 작성한 논문의 맥락을 살리지 않은 채 특정 단어만 부각, 왜곡인용한 것은 사상검증이 아니라 언론의 폭력이다. 세 번째, 어느 누구도 조선일보와 같이 편향된 이념을 갖고 있는 신문이 사상검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그것이 언론자유라고 주장할 지 모르나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 현재 조선일보의 '언론의 자유'는 소모적 논쟁과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네 번째, 공인의 사상검증이 언론의 자유라는 조선일보식의 논리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조선일보는 10월 26일자 사설 <최장집 건국사관 규명해야>에서 최교수의 사상문제를 곁고넘어가는 이유에 대해 "그가 대학 연구자로만 남아 있는 한에는 월간조선이 그토록 정면의 논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리라고 본다. 그는 다름아닌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저서에 드러난 6·25관 등, [최장집적 현대사보기]가 공적으로 논란되기에 이른 것이다"라며 공인의 사상검증이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즉 최교수가 학자로만 남아있다면 그의 논문은 문제삼을 수 없고 공인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문제삼는 논문은 바로 최교수가 학자로만 있을 당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식대로라면 연구자일 당시 그가 쓴 논문을 어느날 그가 공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치기라도 해야 된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교수는 학자로서 논문을 썼을 뿐이고 그런 그가 공직에 임명되었을 뿐이다.

만일 조선일보가 최교수의 사상이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그를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무게가 실리는 게 논리적으로는 오히려 타당하다. 그러나 월간조선 11월호에는 "북한의 남침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인했던 공산세력의 움직임을 민중항쟁으로 보는 그의 시각은 김대중대통령의 역사관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하여 최교수와 김대통령을 차별화하였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공인 사상검증의 자유는 결국 '진보인사 죽이기' 수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조선일보의 후속기사에서 언론자유를 옹호한 대표적인 글은 11월 9일자에 실린 <언론사 이념표현은 자유>라는 제목의 주부독자글과 외대 신방과 정진석 교수가 쓴 <공인검증 가로막는 것은 언론자유 억압하는 행위>라는 칼럼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언론의 자유가 '사실로부터 자유'일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조선일보의 보도가 학자의 글을 비판해서 문제가 아니라 논문을 상당히 왜곡, 사실에 기반해야 할 언론보도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에 이들은 설득력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따라서 "논문에 대한 비판을 당장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며 언론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탄압이고 폭력이다"라는 정교수의 주장은 논문에 대한 비판이 왜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세부적 견해가 무시된 주장이다. 더군다나 최 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과거 사상검증을 이유로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을 일삼와왔던 행태를 답습한 것이라는 점을 언론학자인 정교수가 정말 모르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언론사 이념 표현은 자유>라고 했던 주부독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우리와 비교도 안 될만큼 보장되고 언론의 정치적 입장 표명이 거의 공식화된 미국언론을 우리의 현실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1월 5일자 연세대 송복교수가 쓴 칼럼은 '공인은 검증돼야 한다는 제목만 보면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렵다. 공인검증에 누가 이의를 달겠는가?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송 교수는 "그 소임을 특정 언론이 했다면 그 언론의 검증이 정확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시비는 있어도 그 검증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성토나 규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송교수의 말대로 최장집 교수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논란은 바로 검증이 정확했는가에 대한 시비가 핵심이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은 최교수의 반박과 여러매체와 단체의 주장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송교수는 이어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리게 했다는 구절은 누가 읽어도 일단은 눈을 한 번 멈추게 하고 생각을 한번 가다듬게 하는 구절이다"라며 "물론 글 전체로 봐서는 문제삼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역사적 결단'에 대한 조선일보의 주장이 논문의 맥락과 동떨어져있다는 주장과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말에 『역사적 결단』이라는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뜻이 함의된 말이다. ... 김일성의 전면전 결정에도 이 용어를 갖다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다소 억지스러워 보인다.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쉬운 점은 송교수의 주장대로 최장집 교수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지적받아야 한다면 동시에 '글 전체로 봐서 문제삼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전면내세워 비판하는 조선일보의 보도 역시 비판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송복교수의 글에서는 최장집 교수의 논문이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좌파주장이라는 결론은 없다. 그래서인지 조선일보는 송복교수의 글 아래 "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송교수의 칼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외부필자 칼럼에 대해 위와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 독자투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저술가 박정국씨의 글이다. 이 저술가는 11월 4일자 <'진보적 지식인' 생태 한심>이라는 글에서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진보적 지식인 뿐 아니라 보수주의자들도 누려야 하는 귀중한 자유다"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최장집 교수는 물론 그를 옹호하거나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이들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눈에 띄는 것은 조선일보가 그의 글을 10월 28일에도 실은 바 있으며 11월 4일에는 박스까지 동원하는 등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독자투고마저도 '사유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 한겨레 신문 트집잡기, 위기의식의 발로인가?

조선일보 11월 5일자 [미디어 다시보기]에서 진성호 기자는 <한쪽 눈만 뜨고 보는 『한겨레신문』 / 최장집 위원장 파문 편향 보도 일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는 과거와 달리 조선일보의 의제설정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입장에서 보도하는 신문 방송 등을 비판한 글이다.

특히 한겨레 신문이 11월 4일 "언론개혁통신연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국민승리 21

등 단체가 최 위원장 문제로 조선일보를 비판했다고 집중소개했다"면서 그러나 '자유지성 300 인회'의 성명내용을 실지 않았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그러나 한겨레는 다음날인 11월 5일 자유지성 300인회의 성명내용을 기사화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일보가 한겨레를 비판한 바로 이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루 늦게 보도했다고 게 편향보도의 이유가 된다는 얘기가. 이는 트집잡기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조선일보의 편향 보도 사례는 나열할 수조차 없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보도에는 인색한 반면 관변단체의 입장은 거의 대부분 기사화하였다. 바로 이번 논란만 하더라도 조선일보는 10월중 성명을 발표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10/27일, 11/6일 발표), 민예총(10/30일 발표)의 성명서 내용은 기사화하지 않았다.

이 기사에서 진성호 기자는 한겨레 비판에 이어 "한 중앙일간지도 ..."라며 국정감사 중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발언 보도에 조선일보에게 유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같은 날 국민일보는 ..."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중간에 언급한 '한 중앙일간지'는 중앙일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독 중앙일보만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미디어 다시보기>기사는 트집잡기와 한 신문만 익명처리하는 '이상한 기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남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 너무 바쁘게 보내왔다. 이제는 스스로에 대한 검증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만일 조선일보가 자기 검증을 게을리한다면 타자로부터의 검증은 불가피하다. 다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식의 비판을 서슴지 않는 오만한 조선일보에 대해 이제 민주시민들이 나서야 할 것 같다.

## 2. 2차 보고서

### 사실왜곡에 기반한 사상검증이 언론자유인가

최장집 교수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월 11일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사 보도의 문제점을 조금도 인정치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의 판결내용조차 왜곡해석하여 조선일보에게 불리한 내용은 최대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자 해설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월간조선의 기사중 재판부가 문제없다며 기각한 부분들은 최위원장의 6·25 전쟁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재판부도 최위원장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는 최소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거나 나아가 월간조선의 문제제기를 대체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조선일보가 자사 보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또 "재판부가 최위원장측의 이의제기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기사작성과 관련해 인용의 정확성과 전체 맥락에 대한 흐름 파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충격적'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했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흡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에서 ... 좌경사상을 신봉한다는 사실적 주장과 '좌파적·친북적' 표현만으로도 인격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이후 조선일보는 유독 '언론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13일자 사설 <언론자유 문제>에서 조선일보는 "공직자 검증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추가보도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라며 "이번 사건은 이제 [최장집 대 조선일보]의 차원을 넘어 언론자유 본질의 문제로 전환됐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언론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는 전제가 있을 때 뿐이다. 원문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가 아닌 감정에 의거해 자극적으로 선동하는 태도는 언론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면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하루도 빠짐없이 몇주째 이문제를 기사화하고 있다. 특히 여론에 밀린 점을 의식해서인지 국내외 지식인들의 글을 시론이나 해의기고라는 형식으로 실고 있다. 이러한 외부기고의 내용은 논지에 설득력이 떨어져 조선일보가 여론에서 밀리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칼럼 대부분이 '민족해방전쟁'이나 '역사적 결단'같은 용어를 문제삼는 등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례로 17일자 피터 현의 글에서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정권인 북한에 더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좌파가 있다니 전율할 따름"이라 등 감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12일자 만물상에서는 72년 독일의 좌파학생 지도자가 체제속에 들어가 체제를 바꾸자고 주장했고 그들이 공직, 특히 학교를 선호했던 것에 대해 독일 정치인들이 위기를 느껴 공직 취임을 막았던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최교수를 겨냥한 내용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월간조선 12월호에서 그람시의 '진지전' 운운하며 최교수를 공격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가 자료로 삼은 [한국전쟁연구](90년 태암출판사)는 이미 절판되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이다. 연구와 고민의 결과로 나온 수정본은 무시한 채 굳이 절판된 책을 문제삼는 것은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공인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검증이 '사상검증'일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상검증을 빌미로 한 사람의 사상을 옹고 그릇의 잣대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실왜곡에 바탕을 둔 조선일보의 사상검증은 기사로서의 가치도, 검증의 공정한 기준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 IV. 관련 성명서 모음

성 명 서

-- 『월간조선』의 왜곡보도와 관련하여 --

1998년 10월 23일

한국정치학회 회원이자 증견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학술 논문에 대한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의 기사(우중창,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해 한국정치학회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입장을 표명한다.

먼저 우리는 문제의 기사가 사실 및 논지의 중대한 왜곡이자 이데올로기적 인신공격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동 기사는 오랫동안 한국정치를 가르치고 연구해온 학자의 학문적 성과를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특정 문구를 작위적으로 재단하여 문제삼고 최고수가 마치 친북적인 학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 기사는 김일성이 6.25 당시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는 문장을 마치 최고수가 김일성의 결단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며 지지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전후 맥락에 비추어볼 때 이 문장의 핵심요지는 6.25는 김일성의 결정에 따른 남침임을 분명히 하고 그것이 한반도역사에 엄청난 비극과 후유증을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고수의 논문은 바로 다음 문장에서 김일성의 결단은 “오관”이었음을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다. 동 기사를 인용한 조선일보 1998년 10월 20일자 가판본은 아예 최고수가 “6·25는 김일성의 위대한 결단” “6·25는 미국서 남침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사실을 날조하여 보도하고 있다.

학자의 학술 연구를 특정의 이데올로기적 잣대에 의해 건강부회식으로 왜곡하여 매도하는 것은 학자의 인권과 명예에 대한 침해임은 물론 자유로운 창의에 바탕한 학문자유와 학문활동,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기사는 기본논지의 공정한 인용에 바탕한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논지의 부당한 왜곡에 바탕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지적·이념적 폭력인 것이다. 이는 학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체시를 가르막아 학문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한국정치학회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고 이를 학문적으로 옹호해왔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 만큼 중요하며 언론의 자유가 ‘왜곡의 자유’나 ‘오브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수용하는 학술단체로서 한국정치학회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 도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엄정 중립이 학문의 자유와 학문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침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한국정치학회는 학문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월간조선』에 대해 사실 및 논지 왜곡에 근거한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과 문제의 기사에 대한 적절한 정정과 사과를 촉구한다.

한국정치학회  
회장 백영철

Press Conference On 'Joint-Statement on Korean Academic Freedom'

243Royce Hall, UCLA 1:00 PM, October 30, 1998.

Read by Professor John Duncan(EALC,UCLA)

Professor Gi-Wook Shin(Sociology,UCLA)

Signed by 20 Other Scholars.

Joint-Statement on Korean Academic Freedom

We, scholars of Korean studies outside Korea, are deeply concerned with the current accusations against Professor CHOI Jang Jip,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Korea University and chair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tate Policy Planning in Korea. We find the Choson Ilbo's charges, which are based on several quotations taken out of context, that Professor Choi's works are "left-leaning" to be absurd. We respect Professor Choi's scholarship and do not believe it to be "pro-communist" in any way. The Choson Ilbo is attempting to foster on the public an authoritarian interpretation of modern Korean history by labeling scholars who have other views with politically loaded terms such as "leftist." This poses a great threat to academic and intellectual freedom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endangers the healthy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throughout the world.

We who are working on Korea in North America, Europe, Japan, and Australia are proud of w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achieved over the last half-century, both economically and, more recently, politically. We do recognize that Korea is still divided and that Korea still cannot escape this kind of black-and-white "cold-war" mentality nearly ten year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bloc. This outdated ideological view will not help Korea attain reunification. Most countries in the world are currently working toward broadening the spectrum of academic and public discourse, and we sincerely hope Korea will join this international trend rather than digressing to the cold war logic. It is our belief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a respecta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ly when this kind of outrageous attack on decent scholarship is no longer practiced.

Name	Position	University
Robert Buswell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professor and Chairman,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hungmoo Choi	Professor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Kyeong-Hee Choi	Professor of Literature	University of Chicago
Donald N, Clark	Professor of History	Trinity University
Alain Dolissen	Professor	EHESS(Netherlands)
John Duncan	Professor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and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rter J, Eckert	Professor of Korean History Director, Korean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Ross King	Professor of Korea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C. Koh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Hong Yung Lee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John Lie	Professor of Sociolog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David R. McCann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Harvard University.
Dennis McNamara	Professor of Sociology	Georgetown University
Hyung Il Pai	Professor of History and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Palais, James	Professor of History	University of Washington.

Thus we register our serious concern with the Choson Ilbo's charges against Professor Choi and sincerely hope that this kind of politically charged accusation will not happen again.

(list of signers appended)

Singed by:

성명에 서명한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로버트 버스웰(UCLA 한국학 연구소장), 최정무(UC어바인대),  
 최경희(시카고 대학), 도널드 클라크(트리니티 대학),  
 알렌 델리센(네덜란드 EHESS대학), 존 던컨(UCLA), 카터에카트(하바드대),  
 로스 킹(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고병철(시카고 일리노이대),  
 이홍영(UC버클리), 존 리(어바나-섐페인 일리노이대), 데이비드 매켄(하바드대),  
 데니스 맥나마라(조지타운대), 배형일(UC샌타바바라), 제임스 팔레(워싱턴대),  
 박순원(일게이오대), 마크 피터슨(브리검 영대), 마이클 로빈슨(인디애나대),  
 신기욱(UCLA), 클라크 소렌슨(워싱턴대), 티모시 탱걸리니(UCLA),  
 케네스 웰스(호주 국립대학)





# 정치개혁시민연대

THE CIVIL SOLIDARITY FOR REFORM OF POLITICS

중동대포 김수규, 이삼열, 손봉호, 손광호 /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성동빌딩 별관 3층  
전화 776-3913 777-1843 / 전송 755-2830 / Email nacif@chollian.net nacif@nctsgo.net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리중  
제목 : 정치개혁시민연대 논평

## 최장집교수에 대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비난을 우려한다!

21일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회의와 비상대책위원 열어 최근 <월간조선>에 의해 제기된 최장집교수의 사상문제에 대해 "김대중정부기 최교수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따라간다면 우리 당은 이를 바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한다. 또 자민련도 20일 개최한 안보복위세미나에서 대통령자문 정책위원장이던 최교수의 저서내용을 비판하면서 "최교수가 처변되지 않은 것은 경부실책" "대한민국뿌리와 극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시각" 등 최교수의 퇴진을 주장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고 한다.

우리는 대통령자문 정책위원장이던 최교수가 진보적 학자로서 김대중정부의 개혁자업에 이끈적 기초를 제공한 학자로 알고 있다. 또 그가 오래전에 저술한 책사의 일부내용이 최근 <월간조선>에 의해 소개되면서 여야간에 사상논쟁이 일고 있는 정세의 지식밖에는 없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쟁은 매우 문제가 많은 점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최장집교수본인의 해명서를 보면서 사람의 생각이란 글이나 말진체를 두고 흐르는 기본적인 맥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최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월간조선>은 최교수저서의 글은 전후좌우 연결없이 자의적으로 단장을 짜집기한 흔적을 쉽게 찾을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김일성의 6.25남침을 최교수가 "역사적 결단"이라고 기술한 부분을 들고 있으나 "역사적 결단"이란 긍정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김일성의 오

공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이 최교수의 주장이고, 그 주장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둘째, 국민회의의 주장대로 최교수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왜 그 당시 정보기관들이 최교수의 저서를 문제삼지 않고 하필 김대중정부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은 때 문제제기를 하느냐 이다. 군사정권하에서나 김영삼정부하에서 최장집대중학자로 분류된 최교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는게 상식이라면 이제서야 문제삼는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의도가 배경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셋째, 개혁의 대상인 기독교층의 대대적인 반격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기독교층의 반격은 항상 사상문제를 대개로 한 맥카시즘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번 최교수사건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만일 이같은 보수기독교층이 개혁에 저항하는 수단으로서 최교수의 사상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같은 맥카시즘을 수세에 빠진 한나라당이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그 결과에 대해 명백히 책임져야 할 일이다. 국민회의도 야당과 자민련, 그리고 일부보수인권이 비이성적인 사상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피해의식에 젖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김영삼정부 초기 진보적 인사였던 한완상동일부총리와 김정남 청와대사회복지수석비서관이 수구기독교세력의 총공세에 밀려 퇴진하면서 김영삼정부의 개혁이 좌초되어갔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금번 최장집교수에 대한 시비도 이와 유사한 수구기독교층의 공세인듯한 인상을 지울수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김대중대통령도 문제가 회피한 사상논쟁에 휘말려 김영삼 전대통령이 걸어간 전철을 밟아서 는 만원나는 충고를 하고자 한다.

또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한국사회는 극우보수세력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어지는 듯한 발언들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성명서

최근 <월간조선>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 교수를 상대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이념논쟁을 제기하고 나섰다. <월간조선>은 정치학자의 연구논문을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공격하여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나서는 한편, 아무런 근거없이 신정부가 추진하는 “제2건국운동”이 마치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운동인 양 의심하고 나섰다. 이에 우리 국민화합 시민연대와 국민화합 운동연합은 이같은 매커시즘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최교수의 인권을 유린한데 대해 사과하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우선, <월간조선>은 학자의 논문을 논지와 상관없이 거두절미하고 특정대목만 인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월간조선>이 문제의 기사 제목으로 삼았고,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던 표현은 김일성이 6.25남침을 통해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는 대목이며, 이것을 최교수가 마치 그 결단(?)을 찬양한 것처럼 기술하였다. 그러나 논문을 검토해 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총자적 의미 용어구사일 뿐이며, 최교수의 반박처럼 한국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이다. 그같은 의도는 다음 문제아에서 “김일성의 오판을 유도하였던 요소는...국제 정치적인 조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던 냉전체제의 성격과...미국의 힘이였다.”고 한데서도 드러난다. 우리는 <월간조선>이 왜 이런 식의 건강부회를 마다하며 최교수를 몰아세우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월간조선>의 저의는 문제의 기사를 보여주듯이 “제2건국운동”이다. 제2건국운동이란 제1건국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월간조선>은 마치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것인양, 시종일관 “제2건국운동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다른 한편,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적극 인정했다”고 하여, 마치 현정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묘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제2건국운동”은 IMF시대를 맞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동시에 발전하는 보편적 세계국가로 지향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건국부정, 과거부정, 북한찬양의 의도가 있단 말인가? 참으로 <월간조선>은 작금의 국난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10월 24일자 조선일보는 더욱 우려할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4면 전면을 할애하여 <월간조선>의 반박문을 통해 다시 한번 시대착오적 논쟁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주장이 특정단어-구절 한 두 개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전제하며, 5가지 사항에 걸쳐 최교수를 반박하고 있다. 우선, 그같은 문제제기 자체가 얼마나 자의적인 것이며, 최교수가 수십편의 논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양심적 지식인이었음을 확인해 보았는지 <조선일보>에 엄중히 묻는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한국정치학의 최고 권위체인 한국정치학회의 성명보도를 의면하고 있다. 참으로 <조선일보>의 무지에 놀랄 뿐이며, 일부 맹목적 대중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월간조선>은 과거에도 시대착오적, 냉전논리적 매커시즘을 주요 기사로 삼았던 적이 많다. 그러나 그같은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갔다. 이미 오래 전에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제3의 길”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다. “제2건국운동”역시 그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그같은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매커시즘적인 의심과 시대착오적 여론조작을 통해 체제무정의 논리를 유포시키고 있다.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독자들에게 이번 사태의 경위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인권유린과 학문자유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시대착오적인 냉전논리를 고집할 경우,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독자의 준엄한 “역사적 결단”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화합시민연대(공동대표 장윤환)  
국민화합운동연합(사무총장 기세춘)

<최장집교수 저술의 사상논쟁에 관한 우리의 입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동은 동료교수인 최장집교수에 대한 [월간조선] 11월호의 기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교수의 충격적 한국전쟁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월간조선]의 기사는 단어와 자구의 선택적 인용과 표현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최교수의 논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월간조선]은 최교수가 그의 저서[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서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하여 이것은 최교수가 김일성의 남침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해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역사적"결단이라는 표현은 그것이 우리의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족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의 중립적인 의도로 쓰였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우리는 최교수가 이 책의 어디에서도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한 적이 없으며, 동시에 6.25가 남침유도에 의해 일어났다는 시각을 비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둘째, 문제의 [월간조선]의 기사는 최교수를 사상 검증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이고 자의적인 기준과 척도를 사용하여 이러한 검증에 필요한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본다. 역사적 사실의 학문적 해석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행해져야 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선별적 인용과 자의적이인 해석에 근거하여 최장집교수의 사상을 공격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최교수의 한국전쟁에 관한 학문적 분석이 잘못 이해되고 그로 인해 최교수가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주관적인 잣대에 따라 최장집교수의 저서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서 나타난 최교수의 한국전쟁 해석을 재단하고 단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본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동

왜곡의 불로 전 조선일보를 고발한다.

- 조선일보의 최장집교수 왜곡 보도사건에 대한 대학원총학생회 성명서

10월 19일 발간된 11월호 월간조선의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제하의 기사는 최장집교수님(본교 정외과 교수, 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한국전쟁관을 문제삼았으며 이어 10월 20일 조선일보는 월간조선의 내용을 소재로 '6.25는 미국서 남침유도한 것', 제하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최교수님의 학술서중 '한국 민주주의 이론'과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의 내용을 탈문맥적으로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용공의 색칠을 하려는 조선일보의 더러운 음모임이 명백하다.

'김일성의 우세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그를 전쟁을 통한 총체적 승리라는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하였고, 결국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오판'을 유도하였던 요소는... '라는 내용이 월간조선 기사에서는 문맥은 식재한채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으로 급기야 조선일보에서 '6.25는 김일성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것으로 둔갑해버리고 마는 그들의 심각한 사고장애에 우리는 분노의 차원을 넘어 허탈함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금번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의 기사는 단순히 한 신문사의 한 인물에 대한 왜곡보도 이상의 문제제점이 존재한다.

■ □ - 첫째, 월간조선의 왜곡보도는 학문적 저술에 대해 의도적인 왜곡을 가함으로써 한 교수자원이 아닌 전체의 학문적 성과와 발전을 왜곡하고 있다.

왜곡의 근저에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르고 붙이는, 신기의 편집기술을 통해 용공의 혐의를 덧씌우고 대중적인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려는 해묵은 발상이 존재한다. '빨갱이 마녀사냥'은 개인의 해명과 반박자체가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어 매도의 논리가 대중적으로는 비공식적인 담론의 우위를 점유하게 된다. 논점자체를 '빨갱이다'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틀로 묶어 버림으로써 '누구는 빨갱이다'라는 애초의 고발(?)은 그 진실여부를 떠나 대중적으로 승리하게 되며 조선일보의 '반공상업주의'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논리가 학문과 연구활동의 논리 위에 굳립하는 것에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한국사회의 학문발전과 연구흥진을 꺾어내는 심각한 병폐라 아니할 수 없다.

금번 왜곡보도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다. 하기에 왜곡보도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저열한 반공상업주의에 맞서 학문적 성과와 정상적인 학문적 풍토를 수호하려는 정상과 비정상,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

■ □ - 둘째, 금번 왜곡보도사건은 조선일보가 '대통령 자문위원'과 '정책기획위원'으로서의 최장집교수에게 이념적 음모를 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도적이며 계획적인 범행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들의 기사를 살펴보면 일정한 방향으로 다분히 의도적인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의도적이라는 것은 왜곡보도의 본질이 비단 학문적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월간조선의 수구적인 정치논리를 관철시키려하는 고도의 정치전략적 문제를 제기한다. 과거 문민정부하에서의 한완상 부총리를 비롯한 개혁적 인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의도적인 공격은 이미 그들의 성공사례목록에 올라있다. 또한 월간조선의 부도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호응이 잇따르고 있다. 학문적 연구를 정쟁화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볼 때, 금번 왜곡보도는 사상과 이념을 문제삼아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보수세력의 음모'에 다름아닌 것이다. 바로 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이다.

■ □ . 셋째, 기쁜 조선일보사의 논조와 왜곡보도사건은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선일보같은 망나니 언론은 '역사적으로 절단시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하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함을 동시대의 지식인과 청년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비상식에 맞서 이성의 힘으로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학술연구집단으로서 고대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대학원총학생회는 학문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조선일보는 반이성적 음해를 즉각 중단하고 공개적인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자민련 또한 외국에 기초한 정략적 발언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 ○ . 그러다 학교 대학원총학생회는 학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조선일보불매운동, 항의선전운동 등 각 대학원 및 학부 총학생회와 더불어 대학원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제12대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 조선일보사의 최장집교수 논문 왜곡보도에 대한 한국대학원생 대표자 협의회 성명서

1998년 10월 27일

조선일보는 「월간조선」 11월호와 「조선일보」(10.21일자)를 통해 현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상성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문제삼은 것은 최교수의 「한국 민주주의 이론」과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만」 중 한국전쟁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논문의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한 구절만을 인용하여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식의 해독은 냉전, 수구의 논리로 이념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원생들을 대표하는 한국대학원생 대표자협의회는 한 대학의 교수라는 개인에 대한 매도차원이 아니라 학문활동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간주하여 학술연구활동을 하는 각 대학원 차원에서 조선일보사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사의 왜곡보도사건은 수도 없이 저질러져 왔고 그들이 동원하는 저질적인 반공상업주의는 이미 한국사회의 민주적발전과 합리적이고 건강한 학문의 형성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금번 왜곡보도사건은 한편으로는 극우세력을 자극하고, 현 정부의 이념과 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최소한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조건마저도 뒤흔들고 훼손시키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됩니다.

한국 대학원 대표자협의회는 금번 최장집교수 왜곡보도사건을 '최장집교수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조선일보사건'이라고 규정하는 바입니다. 조선일보는 그간 검중이라는 것을 의피로 자의적인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한완상교수, 외대 이장희교수에 대한 왜곡보도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보도는 학문적 자율성을 침해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사회에서는 조선일보에 대해 대응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냉소로 자기위안을 삼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기에 금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지식인 사회가 주도가 되어 한국사회의 올바른 지식풍토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한국 대학원생 대표자 협의회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한국 대학원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홍정우 성균관대 대학원 학생회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서강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단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충남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원광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영남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구. 민주언론운동협의회)

(121-714)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다보빌딩 7층 (전화) 714-4562~4 (전송) 714-1255  
천리안·하이텔 : 민언련

수신 : 각 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  
발신 :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성유보)  
제목 : 최장집 교수에 대한 월간조선, 조선일보 보도 관련 성명서  
일시 : 1998년 10월 27일 (화)

### 조선일보는 언론기관인가? 권력기관인가?

- '최장집 교수'에 대한 극우적 '사상검증'에 부처 -

지난 19일 발간된 <월간조선> 11월호는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 교수(고려대)의 저서와 논문중 일부를 짜집기식으로 발췌인용, 조선일보사 특유의 극우적 '사상검증'을 센세이셔널하게 전개하고 나섰다.

본지인 조선일보가 뒤이어 연일 '지원합포사격'을 가하고 있음은 우리가 다 목격하고 있는 사실이다. 조선일보는 김영삼 정권 집권 초기에도 한완상 전부총리겸 통일원장관,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해서 용공 좌익 세력으로 몰아 공직에서 몰아낸 바 있는데,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도 집권 6개월여 후에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김영삼정권때나 지금이나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극우적 사상검증의 '표적'을 정하고 그 '표적인사'의 발언이나 논문을 앞 뒤 맥락을 생략한 채 조합해서 월간조선, 주간조선, 인터넷 조선, 그리고 조선일보를 통해 일제히 집중조명함으로써 '우익세력이며! 총궐기하라'고 부추기는 방식이다. 조선일보사의 이같은 행태는 최소한 아래의 몇가지 이유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첫째, 조선일보가 '우파적 노선'을 취하느냐 마느냐는 조선일보사의 주장대로 그들의 자유이겠지만, 자신들의 노선과 다른 논리를 가졌다해서 '반민족적' 또는 '반국가적' 인사로 단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폭력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선일보의 사상검증적 노선은 건전한 우파의 논리가 아니라 파시즘적 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조선일보는 최고수의 학문적 자유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공직에 있는 인사에 대한 '사상검증'은 언론의 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대한

민국의 주요 공직자, 주요 정치인은 조선일보식~우파주의인사로만 채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일보는 지난 군사독재시절부터 현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끊임없는 '사상검증'에 늘 앞서왔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해서 지난 25대 대선때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대통령 만들기'에 그렇게도 앞장섰던가? 또 이제 국민들의 신성한 투표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지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상적 입장은 무엇인가?

오늘날 사회각계에서는 주요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식 언론자유가 지금도 통용된다면 '인사청문회'에 앞서 중요공직 인사 안 자체를 조선일보사류의 언론기관 결재부터 받고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 조선일보는 중요공직자의 정책 책임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의 민주화가 진행되면 될 수록 공직자 1인의 영향력에는 비결할 수 없을 정도로 메이저 언론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조선일보사가 특정인의 지난날 언행에 대해 단어 하나하나를 시비한다면, 우리는 그에 앞서 조선일보사의 과거 행적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싶다. 유신체제에 대한 지지, 전두환·노태우 두 군사독재자에 대한 대통령 만들기 등등 우리가 조선일보사의 반성을 촉구할 사례들을 너무나 많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선일보의 식민지시대 친일행각에 대한 사과를 지금 당장 듣고 싶다. 그 무수한 사례들 가운데 단 한가지 기사만을 인용하면,

“황군의 신속한 행동으로 단번에 지나 수도 남경을 못질으게 되었다는 전선뉴스가 보도하여진지 불과 수일에 이제 최후의 공성으로 단말마적 저항을 계속하던 남경성도 10일 밤으로 완전 함락을 보게되었다 ... 그래서 남경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전국적으로 국민 환호의 대상이 되어 그동안 총독부에서 각도에 미리부터 전달된 바에 의하여 준비가 진행되어 있듯 [남경함락축하제]는 이제 전 조선적으로 집행하게 되어 명 12일에 일제히 경성을 비롯한 전 조선 각 주요도시와 군 면 촌을 통하야...제등행렬, 봉고제 등이 버러질 것이다”

(조선일보 1937. 12. 2 머릿기사)

끝으로 우리는 현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조선일보의 극우적 사상검증에 대해 의연한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현 세계정세와 전혀 동떨어진 구시대적 이데올로기 갈등에 휘말릴 것이며, 그것은 IMF로 대변되는 경제난국 돌파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1998. 10. 27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성 유 보(成 裕 普)

### 이 사

김태진 성한표 심재택 이명순 조양진 정상모 정영일 임상택 이효성 주동황 김동민 최민희  
이기명 김학천 박충렬 남영진 최문순 전영일 이완기 장해량  
금동혁 정지환 이주호 정희종 송덕호 임종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02) 522-7284, 521-0575 팩스 (02) 522-7285

수 신 : 각 언론사 / 시민사회단체

참 조 : 편집국장 / 보도국장 / 사회부장 / 법조출입기자 / 담당자

제 목 : <조선일보사의 무분별한 사상검증시비를 경계한다> 성명서 보도 및 홍보 협조요청

전송일자 : 98년 10월 28일 (표지포함 총 3쪽)

### 최장집 교수 논문에 대한 '월간조선'의 사상검증시비에 대한 성명서

1.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의 위해 애쓰는 귀 사(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28일, 최근의 최장집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위원장의 논문에 대한 월간조선의 문제제기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성명서를 보내드리오니, 보도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조선일보사의 무분별한 사상검증시비를 경계한다> 성명서 1부. 끝.

전송 중 이상이 있을 시, 위의 연락처로 즉시 연락 바랍니다.

## 성명서

-조선일보사의 무분별한 사상검증시비를 경계한다-

최장집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위원장에 대한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의 사상검증시비가 문제되고 있다. 월간조선의 도발적 문제제기에 의하여 촉발된 논쟁은 계속 확대되어 청와대에서도 최 위원장의 논문내용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니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월간조선이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언론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사상적 경향은 어디까지인지 하는 원론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먼저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의 문제제기는 문제제기의 수준을 넘어 한 개인을 공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격적으로 매도함으로써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월간조선이 보도기사 제목을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한국전쟁관, 6.25전쟁은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한 점, 최 위원장의 논문에 쓰여진 혁명세력 등의 학문적 용어나 '중국입장에서 중국혁명을 수호해야 하는 존망의 문제였다'는 등의 말꼬리를 붙들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점등이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조선일보도 최 위원장의 반론을 반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해 일으킨 폭동을 '항쟁'이라고 표현한다면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는 다도의 대상이 되며 정통성 또한 부정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최 위원장의 글 전체의 취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용어와 문장을 뽑아낸 후 그 용어와 문장의 뜻은 결국 이런 것이 라는 해석을 붙이고 몇 가지 용어와 해석을 그대로 기사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창작품이 그러하듯 학자의 논문도 작들 전체를 모두 보아야만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의 보도의 경우에도 기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꼭 단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전체를 보면 최 위원장이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의 논리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학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학문적 성과를 이런 식으로 재단하는 것은 이념적 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최 위원장의 한국현대사에 대한 연구에 나타난 새롭고 균형 잡힌 시각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개인이 평생동안 쌓은 학문적 업적을 평가하고 그 경향을 재단하기 위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처럼 평생

같은 학문적 업적을 단순한 문제제기가 아닌 재단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듯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의 최 위원장에 대한 사상검증시비는 그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부 정치권이 엄밀한 검증 없이 최 위원장에 대한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정치 공세적 발언을 하며 월간조선의 기사들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성의 존중과 관용의 정신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덕목이다.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 하여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정치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정권 때 한완상 전 통일원 장관이나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집중적인 사상관련 시비 끝에 이들이 그 뜻을 펴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우리는 최근의 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검증시비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과 일부 정치권의 이 같은 태도는 우리의 정치발전과 학문 연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계에도 중대한 해악을 끼칠 것임이 분명하다. 사상검증시비를 일으킨 조선일보사와 일부 정치권은 무분별한 사상검증시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1998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명 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서울 상곡구 삼성동 1가 12-1 삼선빌딩 4층 (136-041) / 전화(02)765-2010 / 전송(02)765-2011 ID:KCTU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문의: 경성회 대외협력국(765-7269, 011-749-7126) 이화수 대법부국장(016-239-0669)

## 성명서

### 조선일보사는 응공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 최장집교수 논문 왜곡보도 및 사상시비와 관련하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갑용)은 냉전수구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장집교수 논문을 왜곡보도하여 사상논쟁을 유발하고 응공조작을 기도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규탄하며, 이같은 시대착오적인 보수언론의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선일보사가 월간조선 11호에 [최장집의 총체적인 한국전쟁관]이란 제목으로 논문의 뒷가지 난말과 문장을 찌르기하여 최교수를 의도적으로 응공분자로 몰고 있다. 최교수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정치학자로서 이미 그의 역사관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그 무슨 검증은 한답시고 극우적 냉전논리로 매카시즘 마녀사냥에 나선 조선일보사의 파렴치한 태도에 경악과 분노를 감할 수 없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사실에 입각한 학문적 탐구와 학자적 양심까지 이렇게 '빨갱이'로 몰고한다면 도대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어디 있으며, 민주주의가 설 땅이 어디 있는가.

다 알다시피, 조선일보는 일찍이 '노동하이까' '광국신민'을 노래하며 우리의 꽃다운 청년을 징병, 징용, 정신대로 묶어넣은 매국적인 친일행각으로부터 시작하여 유신독재를 극구 찬양하고 80년 5월 무고한 장주시민을 폭도로 몰고 4.13 호헌을 지지하는 등 역대독재정권에 빌붙어 자신의 기득권을 온존시켜온 반민족적 반민주적 집단이다. 가깝게는 95년 한국농신노조의 생존권투쟁을 국가전복세력으로 규정하고 96년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과경용공으로 몰고갔으며, 지금은 악덕기업주의 대량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정당한 노동살권 행사를 기회있을 때마다 불법파업, 폭력시위로 몰아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반노동자적 언론제벌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이런 역사적 과오에 대해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과거 그들의 치부들 가리고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끝



임없이 사상논쟁을 유발시키고 개혁적이고 농민지향적인 민주인사들을 용감한 자로 예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월간조선의 최교수 논문 시비도 제일 먼저 개혁되어야 할, 그래서 역사의 위안길로 사라져야 할 언론사인 조선일보사가 그들의 죄악상을 감추고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일 뿐이다. 21세기가 눈앞에 와 있으며 개혁과 통일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진정한 사회개혁을 통해 경제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정착으로 통일위업을 달성해야 할 이 시점에, 언제까지 냉전시대의 유물인 반공논리에 사로잡혀 역사의 수레바퀴를 기꾸로 돌리려 하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조선일보사에 민족분단을 악용한 극우적 냉전논리와 선정적 안보상업주의에 기초한 용공조작극을 즉각 중단하고 7천만 거래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자제에 노동운동에 대한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도 철저히 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동원하고, 각계 각층의 민주세력과 함께 난호히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1998년 10월 28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주의의 진짜 '적'은 누구인가?

우리는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조선』 11월호의 우리 연구회 전임회장인 최장집 고려대학교 교수(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논문에 대한 메카시즘적인 왜곡보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문제의 기사는 우리 사회가 IMF 위기라는 어려움에 처해있고 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터져 나와 어렵게 성취한 그나마의 민주화의 성과에 대해썩지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문제의 기사가 나간 뒤 한국정치학회, 최교수의 반박문 등이 분명히 그 기사가 왜곡보도임을 밝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측이 진술한 사과와 정정을 하는 대신 『조선일보』의 모든 매체를 동원해 문제를 계속 왜곡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교수의 논문에 대한 『월간조선』의 기사는 '진보/보수'라는 논쟁을 넘어서 학술연구의 전체적인 논지, 전후맥락을 제거하고 특정문구를 자의적으로 부각시킨 명백한 왜곡보도로서 학문의 자유와 학술활동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다. 이같은 왜곡사례는 최교수의 반박문과 여러 단체들의 성명서, 학자들의 칼럼 등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최교수의 논문을 친북적인 북한동조노선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있는 것을 보니 친북적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먼 차이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이번 『월간조선』 사태는 '진보/보수'의 문제와 무관한 왜곡보도의 문제이지만 설사 순수가정으로 최교수가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학문적 다양성의 문제로서 학문의 시장에서 이론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지 언론의 선정주의적 보도, 이에 기초한 여론재판에 의해 심판받아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21세기를 앞두고 갈릴레오식의 여론재판으로 진리를 판정할 수는 없다. 물론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문제삼는 것은 학자로서의 최교수의 주장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최교수의 사상이라고 반박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최교수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그의 사상적 입장에 의해 어떻게 국가정책을 왜곡했는가, 특히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는가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의 학술논문, 그것도 10년전에 쓰여진 논문에 의해 예단되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이런 보도를 통해 『조선일보』가 지키고자 했다고 생각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적'이 과연 그간의 최교수의 학술활동인지 아니면 유신으로부터 5. 18에 이르는 역사적 비극에 대한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였는지 『조선일보』는 자문해 보기 바란다. 특히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역대 독재정권과 결탁해 민주주의의 압살에 앞장서 온 『조선일보』가 최교수를 비롯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투쟁에 의해 획득된 언론의 자유를 적반하장격으로 '왜곡의 자유'로 악용하여 그 비수를 최교수를 비롯한 전국민들에게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 모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사태의 본질은 이번 사태가 최교수에 대한 단순한 사상검증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색깔론을 유발시켜 새정부의 뒷덜미를 잡고 가뜰이나 아사직전에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새정부의 개혁을 좌

초시킴을 위한 것이 진짜 의도이고 최교수는 이를 위한 '표적사정대상'이자 희생양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다른 언론들과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냉담하고 오히려 비판적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북풍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이어 이 같은 사태전전은 우리 사회가 이제 낡은 메카시즘에 돌아갈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조선일보』는 스스로의 무덤을 파기보다 문제의 기사에 대해 정정과 사과를 하고 이번 기회에 낡은 메카시즘적 보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998년 10월 29일  
한국정치연구회 회장 손호철

**월간조선의 진보정당 건설을 준비하는**

진보정당 건설을 준비하는  
국 민 승 리 21

국익을 빙자한 月刊朝鮮의 지출한 생존전략  
月刊朝鮮 11월호의 진보진영 음해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월간조선 11월호에 실린 다양한 기사와 주장들은 결국 하나의 주제이다. 그것은 '國益은 右翼이고 右翼은 國益이라는 논리'이다. 월간조선이 그 자신의 논리와 잣대를 가지고 우국의 충정으로 가득찬 논의를 펴는 것은 그야말로 조갑제 편집장이 개탄해 마지않는 '민주화의 성과인 언론의 자유'일수도 있으니(월간조선 11월호, 61쪽, 편집장의 편지, 한국민주화 10년의 반성 .. 鎗衫의 피를 뿌릴 것인가.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장집 교수의 학문적 견해를 두고 월간조선이 즐겨써온 극우/반공 논법을 쓰는 것은 최장집 교수의 언급처럼 '가치중립적' 학문을 '주관적 가치개입'으로 논하는 것이니 정치단체인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늘 그래왔던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월간조선이 자의적 판단을 통해 한국사회의 색깔논쟁을 주도하면서 왜곡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은 언론으로서의 도를 넘은 것이어서 우리의 견해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최장집! 또다시 빨간 늑대가 나타났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식상해 하고 있다.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와 마찬가지로 월간조선 또는 조선일보가 주도해온 반공 상업주의에 한완상씨와 김정남씨가 빨간 늑대로 물리더니 이제는 월간조선이 자의적으로 규정한 '우리사회 내부의 좌익분자 고발 행사'에 최장집 씨가 등장했다. 최장집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학회가 학문적 해석과 입장을 밝힌바 있다. 자신들의 고유한 논리와 잣대에 맞추어 '공격'의 대상을 선정, 빨간 물울 들어 공격하는 수법은 한국사회의 건강한 비판의식의 형성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월간조선이 늘 걱정하는 '국론의 분열'을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다. 월간조선은 선동주의적 극우논리를 중단하고 최장집 교수와 국민앞에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친공/반공으로 나라를 양분하는 최악의 【월간조선식 이분법】

[대한민국은 反共을 國是로 하여 건국되었습니다. 우익이란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약칭하는 단어입니다. ...(중략)...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들인 반공, 우익, 국가를 경멸하는 중에는 친공, 좌익, 반국가 세력이 있습니다.] (같은 글 61쪽 하단.)

조편집장의 논리에는 국익은 우익이, 사익은 좌익이 추구하는 것처럼 쓰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논리로는 조 편집장이 찬양해 마지 않는 보수-우

의 진영, 군사독재 진영이 키워온 우리 경제의 '독버섯과 같은 부패현상과 부의 불평등 현상을 해명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은 3저 호황의 시기에 땅투기와 정경유착의 중심에 서있던 재벌이나 수조, 수천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하도록 해주고 그 댓가로 수천억의 비리자금을 조성한 구조라는 것은 IMF도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이 정경유착의 한복판에 '군 출신' 정치인들이 자리잡고 있었던 그릇된 모습도 해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월간조선은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는 개명천지에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문민우위, 무인덜시 풍조가 적나라한 외파를 쓰고 다시 등장" (월간조선 11월호 별책부록 52쪽 사진설명) 했다면서 문민/군부의 이분법으로 나라를 망쳤다고 스스로가 개탄한 정치집단의 위험한 흑백논리를 우리사회에 다시 적용하고 있다.' 즉 우리사회를 친공대 반공의 논리로 몰고가려는 월간조선의 주장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비판세력을 잠재우려는 비논리적 극우주의만을 남게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나라를 획일적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月刊朝鮮이 선정한 경제난국 주범속에 재벌은 없다?

한국사회의 경제가 위기라는 점, 그것이 이전 전두환 정권 때만도 못하다는 월간조선의 지적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월간조선이 재삼 이야기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갑제 편집장이 우리사회 희망이라고 말하는 ...시장바닥에서, 공장에서, 군부대에서 만나는 보통의 한국인들, 즉 서민들의 건강함과 소박한... (위의 글 66쪽 하단) 상식을 거부하는 왜곡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된 이유에 월간조선이 지적한 것처럼 정치인들의 당파정쟁이 있을 수도 있고 민주화 세력의 위선적 명분론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조갑제 편집장이 대한민국의 '구성요소'라고 까치치켜세운 언론, 정당, 안기부의(위의 글 63쪽 하단) 태도는 어떠한가. 왜한국의 주요한 언론인 월간조선이나 조선일보는 단 한번의 반성과 사죄의 자세도 없이 '모든 것은 네 탓'이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가. 단 한번이라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힘과 권한만큼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면 조선일보를 비난하는 국민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더 대단한 왜곡은 나라경제를 망친 주범을 나열하는 조갑제 편집장의 글(위의 글61쪽에서 62쪽에 걸친 내용)에 재벌에 대한 책임추궁은 단 한마디가 없다는 사실이다. 한보가 망한 이유를, 삼미, 대농, 진로, 그리고 급기야 기아가 무너지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된 이유에 대해서 소박한 서민들, 우리국민들은 알만큼 다 안다. 과잉중복투자를 불러 일으킨 재벌총수들의 독단과 횡포, 공급횡령과 비자금조성, 무리한 차입경영과 부실대출, 고질적인 정경유착 등등이 조갑제 편집장이 그토록 찬양해 마지않는 박정희-전두환이 기초를 닦은 '고도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이었'(위의 글 61쪽 상단.)던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었음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월간조선이 아무리 진보진영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 해도, 노조와 농민들에게 죄를 돌리려 해도 월간조선과 조선일보가 협력해온 시대를 주도해온 재벌과 보수정치인, 권력의 편에선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은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군부독재 招魂歌를 부르는 月刊朝鮮

위에서 밝혔듯이 월간조선과 조갑제 편집장의 주장은 민주-진보세력에 대한 왜곡과 억지 논리가 대부분이며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이룬 사람들에 대해 심대한 명예훼손까지 저지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조갑제편집장의 주장은 같은 월간지의 기자인 金容三기자와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별책부록을 쓴 金容三 기자가 '현대사의 명예혁명'이라고 표현한 87년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사회민주화 = 비효율의 극치'라는 논리로 민주화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 하는 것은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많은 기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리라 본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정통성이 87년 6월 민주항쟁에 기반하고 있음에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 의미를 두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간조선은 사회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온 많은 민주회생자들과 국민의 숭고한 의지와 노력을 비웃는 행위를 보였다.

이에 우리 국민승리21은 제 진보진영과 민주화 세력의 명예뿐 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참여속에 키워온 민주역량을 비웃고 있는 조갑제 편집장과 월간조선의 즉각적인 사과와 조편집장의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무시할 경우 전 국민의 저항과 비판에 직면할 것이며 더 이상 진보정치진영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998년 10월 30일

진보정당 건설을 준비하는 국민승리21

조선일보는 상투적인 용공조작 놀음을 중단하라  
- 최장집교수의 연구업적에 대한 억지 시비를 보고 -

조선일보사가 [월간조선] 11월호에 “최장집의 충격적인 한국전쟁관”이란 제목으로 연구 논문의 몇몇 낱말과 문장을 앞 뒤 맥락과 상관없이 짜깁기하여 용공분자로 매도하려는 작태를 보고, 이 땅의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던 민예총의 입장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예총은 과거 조선일보의 용공조작 놀음에 막대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그들은 94년 8월 24일자 [조선일보] “민예총과 같은 공산당에 정부가 지원” 운운하는 박용만의 발언기사를 실고, [월간조선]에는 역시 민예총의 각종 발표문을 짜깁기하여 용공조작 놀음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에 민예총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통해 승리하였다. 조선일보는 95년 2월 15일자 신문에 반론문을 실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사례는 조선일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억지로 민주단체에 대한 사상적 왜곡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끊임없이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작태는 이 나라의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가고 있는 보수 세력의 위기 의식을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며, 어떻게 해서든 개혁 추진 세력에 흠집을 내어서 그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작태는 그들 스스로 이 나라의 개혁에 동참할 아무런 의지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보수 우익 사상을 지키기 위하여 민주사회의 기본적이고 민주적인 권리나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사회의 한 축으로서 사회 발전에 동참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다면, 이 사회의 민주화를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들의 입장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냉전구조의 해체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의 환경 속에서 민족통일의 앞날을 염두에 두고 작금의 국난을 헤쳐 나가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또 다시 시대착오적 곡필을 휘두르고 있는 조선일보는 이제라도 위험한 불장난을 그만두기 바란다.

조선일보는 최장집교수에 대한 용공조작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민족 예술인은 모든 민주개혁세력과 연대하여 용공조작 음모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1998. 10. 30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구증서

### SBS <라디오 칼럼>에서 자행된 이른바 조갑제식 '사상검증'의 방송능멸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신봉하고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타인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관용의 토대에서 꽃피는 체제다. 그러나 작금 월간 조선 등 일부 매체에 의해서 자행되는 최장집 교수에 대한 이른바 '사상검증'은 사실상의 매카시즘적 폭력으로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짓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월간 조선의 '사상검증'은 최근 여러 언론 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의 본질적인 지적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같은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와 별도로 10,000여 현업 방송인의 단체인 우리 방송인총연합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지난 10월 22일 월간 조선의 조갑제국장이 그가 출연하는 SBS의 <라디오 칼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당일의 방송시간인 23분여 내내 월간 조선과 조선일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아니 훨씬 더 일방적으로 최장집 교수를 매도한 것이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방송내용은 SBS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우리는 백번 양보해 조갑제 국장이나 월간조선 또는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방식의 언론 자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송에 출연한 조국장이 그런 식으로 '방송심의규정'의 정신을침해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룰 때는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방송심의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라디오 칼럼>의 '칼럼니스트'로서 그런 원칙을 모를 리 없는 -물렀다면 무지와 오만이다.- 그가 방송에 때마침 출연하는 것을 빌미로 '대립되는 사안의 한쪽'을 공격하는 일은 물론 지기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능멸이요, 비열한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이런 것이 조갑제식 '사상검증'인가.

우리는 여기서 그런 작태를 결과적으로 용인한 SBS의 처사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SBS당국은 문제의 방송이 나가기까지 제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했는가. 그리고 그런 방송이 나간 후 지금까지 최장집 교수측에 동시간만큼의 반론을 제공하는 등 성의있는 조치를 취했는가.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불감증은 경영진의 방송에 대한 무철학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주시할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우리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보루임을 되새기 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시비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명심하는 바이다.

1998.11.2

한국방송인총연합회

## 사월혁명회

151-061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1632-2(2층) 전화: 888-3682 전송: 872-7588

사월혁 98-28

1998. 11. 2

수신 :

발신 : 사월혁명회

제목 : 조선일보의 언론폭력 규탄 성명서

###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적 언론폭력을 규탄한다

위대한 민중의 승리인 4월혁명은 역사속에서의 굴종과 독재와 이간질을 가장 중요하다. 당연히 4월혁명의 투혼은 반민족 반민주언론의 표본인 조선일보를 가장 추악한 언론폭력배로 주목해 왔다.

조선일보는 일본군국주의에 기생하여 곡필아세하던 버릇대로 5.16 쿠데타에 빌붙어 군사통치와 유신독재의 대변인을 자임해서 획득한 언론재벌의 물적자산을 토대로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역정권을 추동해 왔다. 조선일보는 또한 반역사적 3당합당의 산물인 김영삼정권의 산파역이자 조련사로서 부패정치와 과국경제의 국가위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권언유착 정경유착의 표본이었다. 따라서 국민은 50년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가 개혁작업 과정에서 조선일보를 어떻게 처리해 내는가를 주목해 왔다.

일제 식민통치하 민족반역 주구언론의 치부를 새삼 재론하지 않더라도 조선일보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국민염원을 음모적으로 집요하게 파괴시키는 것을 그의 상업언론의 최대목표로 해 왔다. 조선일보는 극우반공 냉전이데올로기를 전가의 보도로 하여 세상만사와 모든 사물을 흑백논리로 재단, 선한 인간양심과 민족정기를 난타하는 언론고문 행패를 자행해 왔다. 인간육신을 짓이기는 이근안고문기술자를 국민이 저주한다면 조선일보는 인간정신을 황폐화시키는 또하나의 고문기술자로 부르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는 이승만되살리기와 박정희신앙을 조작하여 역사의 시계바늘을 군사통치, 자유당독재, 더 거슬러 일제 식민통치시기로 되돌려 놓으려는 정신착란의 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자주의 민족기반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자 분기했던 4월혁명의 열이 오늘날 헌법정신의 근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4월의 투혼을 계승하고 깨어있는 국민은 단호히 조선일보의 언론쿠데타적 횡포를 용서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색깔논쟁과 용공음해로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여망에 뻔뻔스럽게 도전했던 조선일보가

김대중 당선자의 민주적 선택의 귀결에서 자기반성과 자발적 개혁의 변신이 있기를 참고 기다린 일말의 국민적 관용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버릇개 못준다고 최장집교수 물어뜯기에서 조선일보는 망상적 본색을 기어히 드러내고 말았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있는 최장집교수 죽이기는 다름아닌 김대중대통령 죽이기 이다. 만에 하나 최장집교수의 논문이 거슬린다면 맘모스 신문사 주최의 학술논쟁을 벌이면 될 것이 아닌가.

이전의 김대중죽이기가 야당말살과 정치지도자에 대한 테러였다면 지금의 김대중대통령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 합헌적 정부죽이기, 국민 죽이기, 국민정부의 개혁죽이기이다. 조선일보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솔직히 고백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야 추락하든 말든 조선일보의 호강을 담보했던 독재의 망령을 되살려보자는 음흉한 흑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라야 망하든 흥하든 조선일보만 살지면 된다는 망국적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이 안락해 하든 불안해 하든 매카시적 광란을 부추기는 반민주적 폭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진리와 정의의 구현을 위한 사상과 학문의 자유, 곧 민주주의 요체를 박살내어 암흑시대로 되돌려 인간 자체를 파괴시키겠다는 패륜 짓거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최장집교수가 빨갱이란 말인가. 최장집교수가 친북주의자란 말인가. 아예 조선일보는 최교수를 간첩이라고 해야 직성이 풀릴지도 모른다. 조선일보는 온 학계 지식계가 웃고 세계 지성이 모멸하고 국민이 환멸을 느끼는 것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 법률적 단죄보다도 정치적 척결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의 판단이며 역사의 심판이다.

조선일보는 마지막 양식을 되살려 국민앞에 사죄하고 범죄적 언론폭력을 집어 치워라.

조선일보가 국민과 역사앞에 대죄를 서슴치 않는 틈새를 준 것은 민주화와 개혁을 다짐하고서도 감히 이런 사이비 언론에 손 못대는 현정부에도 책임의 반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개혁을 빚겨가고, 엉거주춤한 민주화정책과 통일정책에서 맴돌면서 국가보안법을 온존시키고, 이적과 반공의 재단법으로 국민을 여전히 부자유스럽고 불편스럽게 하고 있는 현정부의 복지부동과 안일주의가 계속되는 한 조선일보의 못된 언론폭력은 거듭 되풀이될 것이다. 4월혁명의 주역들인 우리는 현정부에 대해 개혁다운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충심으로 당부하면서 조선일보는 1960년 4월 19일 혁명의 불길과 함께 서울신문과 반공회관이 잿더미로 화한 무서운 역사의 심판에서 값진 교훈을 되찾기를 엄숙하게 권고한다.

1998년 10월 30일

###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도강호 박태영 심재택 이사장 홍근수 부설사월혁명연구소장 조영건의 회원 일동

## 조선일보사의 사상 폭력에 대한 우리의 입장 편집증적 사상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월간조선 11월호에 실린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인 한국전쟁관”이라는 기사는 보수언론이 사상시비로 어떻게 사상폭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사는 분단이라는 극한적인 대립속에서 안보상업주의와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찬양으로 뿌리를 내려왔다. 우리는 이런 조선일보사의 사상공세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그러나 한완상 부총리, 김정남 교문수석의 중도하차와 같은 과거 정권의 선례가 또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1. 좌우흑백식 메카니즘은 시대착오적 구태다.

골동품이 되어버린 사상논쟁으로 국력을 소모케 하는 것은 첨단, 글로벌 시대의 세계화적 전개에 국가적 낙오를 선동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모두 퇴조하고 이른바 ‘제 3의 길’이라 일컬어질 만큼 인간과 국가의 조화가 강조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그런데 아직도 극우 반공에 집착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사상적 편집증세로 보여진다.

### 2. 거두절미, 보도공세식 사상비평은 야만적 소치다.

학문적 성과와 사상에 대한 비판은 학문적 진지함과 자료비평, 비판의 객관적 준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월간조선을 그 무엇하나 갖추지 못한 채 무지한 집필자의 거두절미식 보도공세를 펼치고 있다. 언론의 비판정신과 시대적 비전은 지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조선일보사의 소아병적 사상공세는 야만스런 억지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 3. 이미 폭력화된 조선일보의 언론자유는 제재받아야 한다.

조선일보사는 자칭 ‘이념 경찰’, ‘사상 보안과’으로 착각하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 왜곡된 언론 자유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월간조선의 사상시비에 따른 안보상업주의의 횡포와 시민정신의 혼란은 국가분열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진정된 안보차원에서 조선일보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최장집 교수의 명예도 회복되어야 한다.

### 4. 독자들의 각성없이 조선일보 개혁없다.

조선일보사의 사실에 대한 왜곡과 편집증적 공세로 볼 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언론의 자유는 정론지와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언론에게만 보장되어야 한다. 그 동안 언론사들의 폭력적 왜곡보도에 대하여 정당, 사회, 시민 단체들의 소극적 자세가 오늘날 언론사들의 오만방자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모든 정당, 시민, 종교, 사회 단체는 주저없이 불매운동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한 연대회의 결성을 제안한다.

### 5. 즉별언론 조선일보사는 사죄하고 국민에게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

운영권이 국민에게 넘겨져 언론으로서의 정도를 견제 해야 한다. 과거 사학 폐해의 대명사였던 인천 신안학원과 광주 조선대학교의 운영권이 시민들에게 돌려져 올바른 대학으로 서게 했던 사례가 있다. 사상공세와 안보상업주의로 연명하고 있는 조선일보사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언론 폐해의 대명사인 조선일보사는 경영권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운영권을 넘기기 바란다. 이제 조선일보사는 전체 소유 주식을 국민들에게 넘겨 정론지로 거듭나야 한다.

1998년 11월 3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 박승원, 문규현 신부

###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와 언론폭력에 분노한다!

지금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를 앞세워 한 양심적인 학자를 안보상업주의의 희생물로 만들려고 인간됨을 쓰고 있다. 최장집 교수의 현대사 연구에 대한 왜곡보도 사태가 그러한 사실을 뚜렷이 말해준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코앞에 두고 일어난 족벌언론 조선일보사의 시대착오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그리고 조선일보사의 작태가 민주주의의 진전과 민족화해라는 시대적 과제 의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최장집 교수의 학문적 논지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짜집기를 통한 자의적인 해석은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사는 공직자에 대한 사상검증이라는 허울 아래 자신의 폐쇄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를 감춘 채, 최장집 교수에 대한 인신공격을 무책임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가 확고한 민주적 신념의 소유자이자 객관적인 역사이해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학자라는 사실은 그의 저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최장집 교수의 학문적 업적은 이미 국내의 정치학계에서 공인될 정도로 탁월한 것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사의 희생양 만들기는 이미 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차원을 넘어섰다. 이번에 <조선일보>가 보여주는 작태는 비뚤어지게 해석된 '언론의 자유'를 빌미로 학자·지식인이 누려야 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사상·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짓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래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합리적 이성과 비판의 정신을 무기로 한 '정론직필'일 경우 그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공세는 무책임한 비이성적, 이념적 폭력행위 일 뿐이다. 나아가, 의도적으로 날조된 기사를 보도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이자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조선일보사가 이번에 자행한 일련의 왜곡보도·역지주장에 대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그 성격을 규정한다. 19세기 말 '반지성'과 '반문명'의 상징으로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드레퓌스 사건이 대망의 21세기를 앞둔 문명사회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모름지기 학자라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다. 진리에 대한 접근은 다양성의 원리와 개방성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학문활동의 자유가 부정되고 그리하여 진리에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죽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역사의 진전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지금 조선일보사는 우리 사회를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 전환을 이룰 만한 중대한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낡은 틀을 유지하기 위해 이념적 폭력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힘있는 비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조선일보사의 오만함이 그토록 오랫동안 '주정됨'이 없이, 아니 오히려 강화된 채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에 연유하는 뜻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역사 진보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지금까지 일부 냉전적 언론이 안기부 등의 반민주적 공안기관에 못지 않게 지식인과 국민대중에게 턱없는 이념적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방임해 온 데 대해 마음 속 깊이 반성하면서, 이제 조선일보사의 비이성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역사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민주사회의 공적(公敵)인 시대착오적 마녀사냥 놀음을 저지하는 일에, 비판적 이성과 시대의 양심을 믿는 많은 분들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이 있기를 바란다.

### 우리의 요구

1. 조선일보사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최장집 교수와 양심적 학자에게 공개 사과하라!
1. 폐쇄적 냉전관으로 개혁적 인사의 이념적 출진내기 행위를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데 앞장서 온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역사 앞에 참회하라!
1.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념적 폭력을 자행한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비이성적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동참해온 조선일보사의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침묵과 방관에서 벗어나 역사의 대장정에 동참하고 지정운동을 즉각 전개하라!
1. 참된 언론의 자유를 신봉하는 모든 비판적 언론인들은 <조선일보>의 비뚤어진 언론자유관을 바로잡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 언론이 비이성적 반개혁적으로 치달는 것을 경계하는 모든 민주시민은 조선일보사가 참회·사과·시정의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조선일보사의 모든 간행물에 대해 구독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1. 언론개혁 없이 참된 개혁은 있을 수 없다. 현 정부가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면 조선일보사에 대한 개혁부터 즉각 시행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판적 지성과 시대적 양심의 힘을 모아 조선일보사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운동과 함께 언론개혁추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1998년 11월 2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외 언론개혁시민연대 참가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방송위원회노동조합, 방송인총연합회, 보건의료인포럼,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시청지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사회시민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킹센터추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맹(준), 환경운동연합 이상 38개 단체)



##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구. 민주언론운동협의회)

(121-714) 서울 마포구 마포동140번지 다보빌딩 7층 (전화) 714-4562 (전송) 714-1255

천리안·하이텔 : 민언련 / 나우누리 : 신문비평

수신 : 각 언론사 여론·미디어 담당 기자 / 시민단체 언론담당 부서

발신 :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성유보)

제목 : 최장집 교수에 대한 월간조선, 조선일보 보도 관련 2차 성명서

일시 : 1998년 11월 6일 (금)

### 조감제·우중창기자를 퇴출시켜라!

#### 조선일보의 계속되는 사상검증논쟁을 비판한다.

우리 민언련은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의 최장집교수에 대한 이른바 사상검증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바 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들도 조선일보의 이같은 시대착오적 행태를 성토했다. 성명을 내거나 집회,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자기성찰의 기미를 여지껏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이 논쟁과정에서 극우냉전주의에 서서 6·25동란을 겪었던 많은 분들의 쓰라린 옛 상처를 되살려 내어 이 나라를 또 한차례 좌우의 대결구조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선동저널리즘, 파시즘저널리즘의 반민주적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또 지난 날의 민주화운동세력, 지금의 시민, 사회운동세력을 도매금으로 좌경세력으로 모는가 하면, 어처구니없게도 현재의 IMF경제난국에 대해 민주운동, 시민운동, 노동운동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알다시피 오늘날의 경제난국은 무모했던 관치금융정책, 무분별했던 외채도입, 그리고 방만했던 재벌들의 부실경영등이 어우러져 초래된 것이며, 그 고통을 지금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구조적 부조리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언론들은 무엇을 했는가? 비판·감시하는커녕 이를 부추겼던 것이 재벌언론·족벌언론들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 민언련은 나라의 오늘을 제대로 진단하여 내일을 대비하기는커녕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조선일보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조선일보는 사상검증 논쟁을 불러 일으키거나 증폭시키며, 기자가 아니라 '사상검찰관'을 자임하고 나선 월간조선 조감제 편집장과 우중창기자 등을 퇴출시켜라.

1. 조선일보는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를 통해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재도약 해야 할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좌우의 갈등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시켜라.

1. 조선일보사 내에는 많은 양식있는 기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냉동된 양심'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조선일보를 파시즘언론에서 구출하여 민주적 정론지로 되돌아오는데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민언련은 조선일보가 민주언론으로 거듭날 때까지 조선일보의 언론폭력을 감시하고 고발할 것이며,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1998. 11. 6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성유보(成裕普)

### 이 사

김태진 성한표 심재택 이명순 조양진 정상모 정영일 임상택 이효성 주동황 김동민 최민희  
이기명 김학천 박충렬 남영진 최문순 전영일 이완기 장해량 금동혁 정지환 이주호 정희종  
송덕호 임종두

#### IV. 관련 기사 모음

98.10.20

## “6·25는 미국서 남침유도 한 것”

# 崔章集교수 저서 파문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던 최장집(崔章集) 고려대 교수 <사진>가 자신의 저서에서 6·25에 대해 “결국 그(김일성)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치권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같은 내용은 19일 발간된 월간조선(月刊朝鮮) 11월호에 “6·25는 김일성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기사로 실려있다. 이 기사는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98년 10월) 등 최 교수의 저서를 분석해 쓴 것으로, 최 교수가 “6·25는 미국의 남침유도에 의해 일어났다”,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공화국은 민족적

민중적 집합의 지에 기반한 역사적 불독」이라는 주장을 폈다는 내용이다. 한 나라 당은 이날 성명을 내 “최 교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자격이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고 밝혔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대변인은 “기사를 읽어 본 결과 6·25가 미국의 음모로 시작됐다는 미국 정치학자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주장과 흡사한 느낌이 든다”며 “간단히 설명을 내고 끝낼 일이 아니며, 공식회의에

野, 대통령 자문 기획총장서 해임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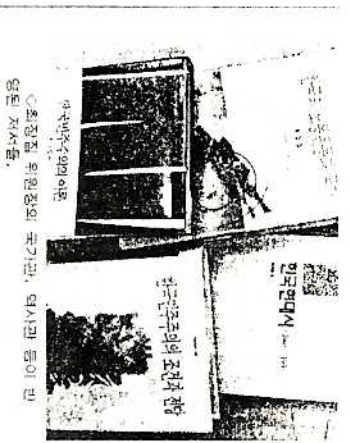
자민련도 문제 논문 정밀검토 착수

없는, 완전한 좌파”라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최 교수를 정책기획위원장에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안상수(安尙守) 대변인은 “최 교수가 6·25 개전 초반의 상황을 「민족해방전쟁」으로, 38선 복진을 「가공할 사태」로 규정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런 좌파적인 인사가 대통령을 조언하는 정책

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전문가들에게 최 교수 논문의 분석을 의뢰한 두 대응책을 정하기로 했다. 최 교수는 최근 국민회의의 한 의원모임에서 자민련과의 「구세력 연합」을 대체할 「민주대 연합」 구성을 촉구했었다.

<金濟光기자·yeonkwang@chosun.com>

「조선일보」 10월 20일자



최정림 위원의 모습. 위원은 '6.25' 당시의 모습이다.

### 역사적 決斷 이란 좋은 업적 표현하는 뜻

#### “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

▲최 위원은 민족통일 반론이라는 용어 대신 '역사적 결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6.25' 당시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는 '6.25'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민족통일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6.25'가 민족통일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6.25'가 민족통일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한다.

### 기습남침 분명한데 '자연발생' 인양 묘사

#### “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

▲최 위원은 민족통일 반론이라는 용어 대신 '역사적 결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6.25' 당시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는 '6.25'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민족통일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6.25'가 민족통일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6.25'가 민족통일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한다.

### 북위원의 위문본서

북위원의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북위원의 위문본서

북위원의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공심 폭동” “人民 항쟁”

#### “공심 폭동” “人民 항쟁”

북위원의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남침” “민족해방전쟁”

#### “남침” “민족해방전쟁”

북위원의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폭동 진압” “탄압-테러”

#### “폭동 진압” “탄압-테러”

북위원의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공심 폭동” “人民 항쟁”

북위원의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남침” “민족해방전쟁”

#### “남침” “민족해방전쟁”

북위원의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폭동 진압” “탄압-테러”

#### “폭동 진압” “탄압-테러”

북위원의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공심 폭동” “人民 항쟁”

#### “공심 폭동” “人民 항쟁”

북위원의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공심 폭동” “人民 항쟁”

북위원의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남침” “민족해방전쟁”

#### “남침” “민족해방전쟁”

북위원의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폭동 진압” “탄압-테러”

#### “폭동 진압” “탄압-테러”

북위원의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공심 폭동” “人民 항쟁”

#### “공심 폭동” “人民 항쟁”

북위원의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문본서는 '6.25'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金日成의 南侵전쟁이 어찌 민족해방전쟁인가

### 崔龍集위원장 반론에 대한 月刊朝鮮의 반박 요지

#### 6.25 開戰초반은 민족해방전쟁...

崔龍集위원장은 '6.25'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6.25'가 민족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6.25'가 민족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 “최대대의 희생자”는 기습당한 대한민국

최대대의 희생자는 '6.25' 전쟁의 희생자이다. 그들은 '6.25' 전쟁의 희생자이다. 그들은 '6.25' 전쟁의 희생자이다.

#### “6.25 최대 희생자는 北민중 1차 수혜자는 李承晩 정부”

'6.25' 최대 희생자는 북민중이다. 1차 수혜자는 이승만 정부이다. 그들은 '6.25' 전쟁의 희생자이다.

#### 崔龍集위원장 반론에 대한 月刊朝鮮의 반박 요지

崔龍集위원장은 '6.25'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6.25'가 민족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6.25'가 민족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 “최대대의 희생자”는 기습당한 대한민국

최대대의 희생자는 '6.25' 전쟁의 희생자이다. 그들은 '6.25' 전쟁의 희생자이다. 그들은 '6.25' 전쟁의 희생자이다.

#### “6.25 최대 희생자는 北민중 1차 수혜자는 李承晩 정부”

'6.25' 최대 희생자는 북민중이다. 1차 수혜자는 이승만 정부이다. 그들은 '6.25' 전쟁의 희생자이다.

#### 崔龍集위원장 반론에 대한 月刊朝鮮의 반박 요지

崔龍集위원장은 '6.25'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6.25'가 민족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6.25'가 민족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 “최대대의 희생자”는 기습당한 대한민국

최대대의 희생자는 '6.25' 전쟁의 희생자이다. 그들은 '6.25' 전쟁의 희생자이다. 그들은 '6.25' 전쟁의 희생자이다.

#### “6.25 최대 희생자는 北민중 1차 수혜자는 李承晩 정부”

'6.25' 최대 희생자는 북민중이다. 1차 수혜자는 이승만 정부이다. 그들은 '6.25' 전쟁의 희생자이다.

#### 崔龍集위원장 반론에 대한 月刊朝鮮의 반박 요지

崔龍集위원장은 '6.25'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6.25'가 민족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6.25'가 민족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 金총리 "6.25때 북한피해가 더 컸다니 崔위원장 주장 이해할 수 없어"

“문제된 논문 읽어봤더니 學問서 벗어나  
“학문의 자유처럼 언론 자유도 보충해야”

【서울 9일 연합뉴스】 김총리(金鍾泌)가 10일 발표한 6.25전쟁 40주년 기념문집(崔章集)에 실린 자신의 논문 ‘6.25전쟁의 피해’에 대해 “학문의 자유처럼 언론 자유도 보충해야”라고 말했다.

11월 9일

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에서 열린 ‘6.25전쟁 40주년 기념문집’ 발간식에서 “6.25전쟁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었던 만큼, 당시의 선택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선택이 지금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총리의 자유민주주의) 개념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총리는 문집에서 “6.25전쟁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었던 만큼, 당시의 선택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선택이 지금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조선일보」 11월 9일자

# “崔교수 논문엔 문제시될 것 없어” “朝鮮日報와는 절대 상종안할 것”

【서울 16일 연합뉴스】 김총리(金鍾泌)가 10일 발표한 6.25전쟁 40주년 기념문집(崔章集)에 실린 자신의 논문 ‘6.25전쟁의 피해’에 대해 “학문의 자유처럼 언론 자유도 보충해야”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1월 16일자

# “大邱폭동은 人民항쟁” 6.25가 민주항쟁전쟁

本社상대 5억 損賠訴: 月刊朝鮮 배포금지 신청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6.25전쟁 40주년 기념문집(崔章集)에 실린 자신의 논문 ‘6.25전쟁의 피해’에 대해 “학문의 자유처럼 언론 자유도 보충해야”라고 말했다.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6.25전쟁 40주년 기념문집(崔章集)에 실린 자신의 논문 ‘6.25전쟁의 피해’에 대해 “학문의 자유처럼 언론 자유도 보충해야”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0월 24일자

# 특파원 朝鮮 11월 特大號

1998년 11월 20일

特大號

**11월 1998년 特大號**  
**11월 1998년 特大號**  
 監修 신생남 電話는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釜山이 울고 있다 김성치 11월 14일

## 崔章集 교수와 충격적 한국전쟁觀

「1953년은 김대중의 역사적 결단... 朝鮮은 민족해방전쟁 對峙는 對峙...」

### 안企部の 고문조직원인가?

주 韓駐韓 代表團 安企部의 고문조직원인가?  
 권력과 유착한 언론의 露骨히 暴露는 가운데 고문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제거됨으로써 保守가 바뀌고 있다. 전설이 밝혀지면 한복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인물연구 崔章集의 世界 1인자

「인수(徐守) 치로는 일제포 환신시킨다」

「李基澤이 단식중이 쓴 「金大中 대통령 前上書」 「저는 대통령보다는 조금은 더 깨끗이 살아 왔습니다」

現代의 崔章集의 世界 1인자

崔章集의 世界 1인자

나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위안과 용기를 얻는 잡지! 月刊朝鮮입니다  
 別冊부록 誌上 전시회 「대한민국 50년-우리들의 이야기」 (1998~1998)  
 父母와 子女가 함께 읽고 즐기는 現代史의 성취, 감동, 의미

민주회의 代價는 비싸게 치러졌다  
 民主化의 代價는 비싸게 치러졌다

미국의 비밀 秘密 米國의 崔正賢 報告 工作  
 崔正賢의 自主국權 의지를 꺾기 위한 崔正賢의 工作

## 회난 李會昌의 격정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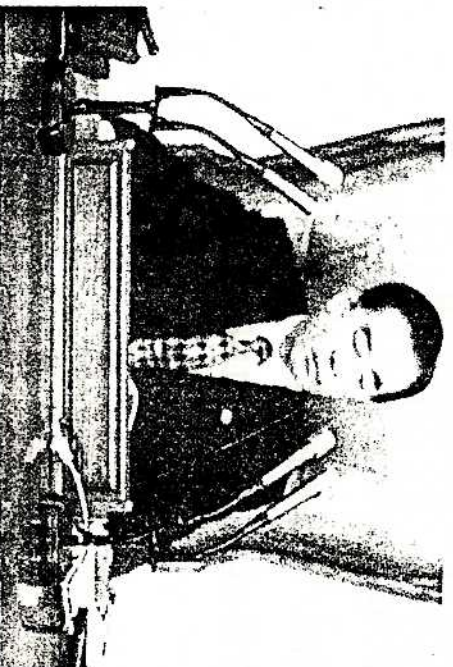
「고문 사실이 드러나면 金대통령 사과해야... 일방적 停戰보다가 한심하다」

反共소년 이승복의 「난 공산당이 싫어요」에 崔正賢의 激情 崔正賢의 激情

崔正賢의 激情 崔正賢의 激情

崔正賢의 激情 崔正賢의 激情

# 金총리 “국립묘지 전우들 어떤 생각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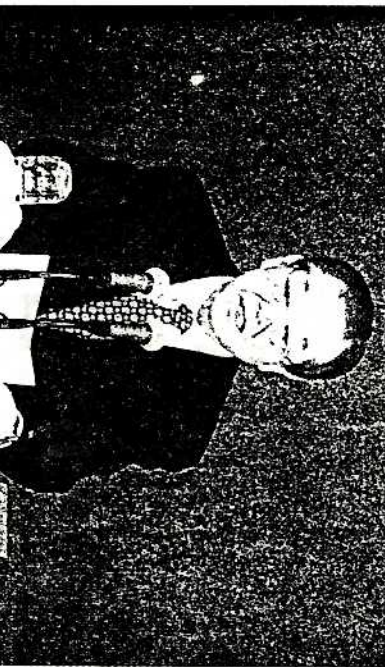


## 對 정부 質問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10명의 여야의원중 5명이 최정집(崔正賢) 대통령직무조정위원회위원장의 「6·25 전쟁관」에 대해 질문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면 최 위원장의 해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국헌 의원은 「최위원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이념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여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최위원장이 현실 정부의 국가정책결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대통령마저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태성 의원은 「최위원장의 6·25 전쟁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질문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되며, 만약 이같은

李會昌의 원 “민족해방 전쟁」은 北韓 주장일 뿐”  
 金昇欽의 원 “「민족해방 전쟁」은 北韓 주장일 뿐”



金총리 답변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총리(金鍾成) 총리가 최정집 위원장 문제 등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韓永熙기자·yhn@chosun.com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총리는 그러나 최위원장의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한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총리는 「국립묘지에 수선만 명령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지켜보고 있는데 전우들이 이런 말들을 사회에 낼 수 있을는지...」라는 데목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여야 의석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의 침묵이 흘렀다.  
 < 金昇欽기자·ok-kim@chosun.com >

# 생사람 잠는 지식풍토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저격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자가,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아예 세계대전으로까지 확산됐는가.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가(One-Shot Theory)만으로 전쟁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2차 세계대전 원인을 연구해서만 해도 수백권이 넘는 다. 전쟁의 복합적 요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객관화하는 작업은 학자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한국전쟁의 원인도 배경, 그리고 성격 규정을 둘러싼 연구자들도 당시의 여러 복합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점에서 최정집(崔正集)교수의 '한국전쟁의 한 해석'은 한국전쟁 연구의 새 지평을 여는 중요한 논문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보수적 냉전이론과 수정주의적 관점만으로는 전쟁의 여

사적 실체 파악이 어렵다고 본다. 6월 25일 새벽 북한의 선제공격은 이미 출간 자료의 발표와 연구 덕분에 의혹의 베일이 벗겨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단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구조적 이해와 전쟁시기마다의 변화 내용을 살펴봐야 전쟁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북한 지도부가 오판했던 '민중해방전쟁 시기', 미군 참전과 제헌회 성격의 전쟁시기, 미국이 아시아 제패를 노리는 무제한적 전쟁 확대 시기, 다시 원상회복으로 돌아가 휴전으로 종결되는 시기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저자 스스로 밝히고 있듯 종래의 냉전논리에 일각한 전쟁 연구들 복합적 구조로 새롭게 조명하는 뜻에서 '한 해석'이다. 시론(試論)일 수 있다. 나 스스로도 이 연구에 진부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한국전쟁 연구의 인공과 사이의 폭을 넓히는 의미있는 연구작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그제 월간조선 11월호의 신광교를 보면서 나 논문 의식했다. "崔正集 교수의 총격적 한국전쟁觀. 6.25戰爭은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 南進은 민족해방전쟁, 北進은 제왕, 北進은 人主. 雙面을 긍정하고 제1간극을 비

판하는 崔교수가 관개한 '제2간극은 동'은 어디로 가나? 라는 광고문이 시커멓게 대서특필돼 있었다. 이렇듯 시커멓게 문안대로라면 崔교수는 전쟁 자체 밖의 시야에서 보고 있고 이런 용공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 어떻게 새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간극운동을 주관하느냐는 매우 신중의 인 법제를 풍기고 있었다. 잡지도 읽었고 문제된 그의 책을 두 의 깊게 살펴봤지만 흥분할 내용이 새롭지 않다. 崔교수가 이미 활못 읽힌 부분에 대한 자세한 빈틈을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장황한 설명을 무언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제책으로 밝힌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만 예로 들어보자. "그(김일성)의 무세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그를 전쟁을 통한 총체적 승리가 가능하게 해어날 수 없게 하였고, 결국 그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무엇보다 김일성의 오랜 유도하였던 요소는 한반도의 국내 정치적 조건에 비추어는 국제 정치적 조건, 즉 급속하게 변하고 있었던 냉전 체제의 성격과 그것에서의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의 힘이었다." 이 문장에서 '김일성의 오랜' 부분은 인용하지도 않은 채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만 부각시켜 崔교수가 남침전쟁을 역사화 결단이라고 미화한 듯이 기술했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긴장관계 속에서 사회는 발전한다. 학문도 마찬가지다. 진보적 연구가 있어야 학문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조금만 진보의 사상을 가졌다면 용공분자로 모는 매카시적 수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집지가 나오지마자 아담과 지민원이 성명서를 내고 崔교수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 고안법위반 구속 운운까지 하고 있는 행태다. 성명서를 내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지자의 원진을 읽어보았다면 이런 소리는 못할 것이다. "지 진구 평 소부터 좀 수상했어, 알고보니, 용공분자였구만." 대충 이렇게 생사담 때리긴 는 게 우리의 지적·정치적 풍토다. 이제 불된 바람이 오늘도 그냥 불고 있다. 개혁이든 민주화고 큰 소리 칠 게 없다. 아직도 언론이 앞장서 레드 캠프를 레스 비리를 뿜어제치면서 선동하고 정치인들이 잇모르고 뒷장구를 치는 이런 한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학문의 자유와 정치의 민주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본성위원 겸 특위문화연구소장

# 후월 鮮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위안과 용기를 얻는 장치!  
12 1998년  
정가 7,500원

## 인턴십 金龍煥

자민련 부총재의 직심 토론



SK 崔鍾賢 회장의  
마지막 나날들



### 미국 공립 교육의 처절한 실패를 체험한在美교육학자의 원고지 4백50장 분량 격정적인 문제제기

### 「미국식 열린 교육으로의 개혁은 학생들을 돈, 학교를 정글, 귀를 민갱통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한국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한번도 듣지 못한  
정적 개혁에 대해 할 것은 대하다. ● 사람이 유일할 자원이 나라에서 학습을 30% 줄어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30% 줄어는 것이다.

일본 학자 崔龍煥의 2002년 월드컵 준비는 順風을 타고 있다  
원저자 崔龍煥  
번역자 김민서  
출판사 창비

## 憲辯의 공개적의



「그람시의 陣地戰 방식이  
(한국사회) 민주변혁의 전략적 경로」란?

헌법쟁점 「선거시회주의」는 우리 헌법질서 속에 수용될 수 있는가  
헌법쟁점 「네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자」임을 부인하지 않아

● 헌법쟁점 「조국해방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 『우리는 좌파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인가

인터넷 金正熙 토론방의 격론중계  
『文蛤기 시대주의로 갔다』

『우리는 좌파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인가

1998년 한국사회의  
이념좌표

『우리는 좌파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좌파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인가